미국, 인도·인니 태양광 고율관세 부과

美 진출 한국기업들 경쟁력 향상…‘반사이익’ 기대

인도 126%·인니 104% 등 상계관세 예비 판정 부과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 청원 “방치시 제조업 재건 실패”

박재홍(오른쪽)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법인장과 크리스 호드릭 한화큐셀 EPC 사업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ESS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기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보조금 수혜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리고 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국가에 적용될 잠정적 상계관세율인 일반 보조금 비율은 인도가 125.87%, 인도네시아가 104.38%, 라오스가 90.67%로 산정됐다.

개별 기업의 상계관세율은 문드라 솔라(인도)가 125.87%, PT 블루스카이 솔라가 143.3%, PT REC 솔라 에너지(이상 인도네시아)가 85.99%, 솔라스페이스 테크놀리지 솔코, 베트남 서너지(이상 라오스)가 80.67%로 책정됐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3국에서 미국에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패널 규모는 작년에 45억 달러(약 6조5000억원)로 미국 내 전체 태양광 전지, 패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 정도다.

이번 상계관세가 남은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 집행되면 미국에 태양광 발전기기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부의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이 작년에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 내 일부 태양광 발전기기 제조 업체가 연대한 이 단체에는 한화큐셀, 한국의 OCI홀딩스가 소유한 미션 솔라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본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수석 변호인인 팀 브라이트빌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자국 내 생산 역량을 재건하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는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수입된 제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조금 수혜 조사를 상무부에 청원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 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두 단계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보조금 수혜 수준과 상계관세율 산정에 이어 다음 달에는 이들 국가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제품을 팔았는지를 따진 덤핑 조사 결과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업체나 노동조합의 청원을 접수한 뒤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금 수혜 수준에 따른 세율을 산정하고 현금 예치와 같은 잠정적 관세 징수에 들어간다.

상무부는 이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최종 보조금 비율을 결정하고 자국 산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한다. 연합뉴스

미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중”

일단 세율 10% 발효…구체적 인상시기는 공개 안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다. 연합뉴스